진안군민의 선택은 정책으로 돌아온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정치의 시간’은 ‘정책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진안군민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속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에 누구보다 진지하고 뜨겁게 참여했다. 그래서 투표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안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7일 진안군을 직접 방문해 농촌형 기본소득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진안군의 인구와 재정을 예로 들며, “6,500억 이면 1인당 250여만 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주목 받는다.

또한 그는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진안과 같은 농산촌 지역이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진안군이 미래 농촌 모델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실천 방향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선 기간 지역별 공약으로 학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파크골프장 확대, 안정적인 주거인프라 구축, 마령면 스마트팜 단지 차질 없는 추진, 용담댐 인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 방안 모색 등도 발표 됐다. 현재 진안군청이 추진 중인 사업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로서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변경이나 수정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 진안군과 같은 농·산촌이 중심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진안은 전북 내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무주, 장수, 임실 등과 연계한 생활권과 산업권 구축을 통해 동부권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통·의료· 디지털 인프라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고원지대의 특성을 살린 건강 치유 생태관광 특구 조성과 진안 홍삼·농산물 가공산업의 고도화는 진안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농촌형 기본소득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결합 될 경우, 지역의 공동체 복원과 인구 유입이라는 구조적 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진안군이 수혜지가 아닌 ‘선도적 농촌 모델’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창업농과 귀농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농업 기술 혁신, 교육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은 단기적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재생의 핵심축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면, 진안군은 전북 동부권에서 자립적 기초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촌형 특례군’ 제도가 마련될 경우 가장 모범적인 대상지로 부상할 것이다. 확대된 행정·재정 자율성과 주민 참여 기반 정책 운영은 진안군이 보다 유연하고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진안 군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진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기반시설의 확대를 넘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 중심의 성장’이다. 전통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자립, 지역화폐 기반 순환 경제 등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농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안군은 더 이상 주변부의 소외된 농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농·산촌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진안군민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 낸 새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시간이다.

**진안군민의 선택은 정책으로 돌아온다**

**1. 새정부 출범과 진안군 발전을 위한 공약**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정치의 시간'은 '정책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진안군민들께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속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7일 진안군을 직접 방문하시어 농촌형 기본소득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6,500억 원이면 1인당 250여만 원 수준"이라며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 사례를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학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안정적인 주거인프라 구축, 마령면 스마트팜 단지 추진, 용담댐 인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안군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그러나 현재 진안군의 정책 추진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진안읍 중심으로 이루어져 면 단위 지역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겉으로 보기 좋은 건설과 건축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 증대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미흡합니다. 셋째,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군민 참여가 부족하여 실제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진안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진안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원지대의 특성을 살린 건강 치유 생태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진안 홍삼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고도화하여 진안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농촌형 기본소득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 복원과 인구 유입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농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기술 혁신과 교육·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재생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인접한 무주, 장수, 임실 등과 연계한 생활권과 산업권을 구축하여 동부권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진안군은 단순한 수혜지가 아닌 '선도적 농촌 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촌형 특례군' 제도가 마련될 경우 가장 모범적인 대상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단계별 추진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1단계(단기)로는 농촌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주민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2단계(중기)로는 생태관광 특구 본격 운영, 농산물 가공산업 고도화, 광역 연계 생활권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3단계(장기)로는 농촌형 특례군 지정을 통한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농촌재생 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와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안군민께서는 스스로 원하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더 이상 주변부의 소외된 농촌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농·산촌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진안군민 모두가 새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때입니다.

**진안군민의 선택은 정책으로 돌아온다**

**1. 새정부 출범과 진안군 발전을 위한 공약**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정치의 시간'은 '정책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진안군민들께서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속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진안군의 미래를 위한 진지하고 뜨거운 결단이었습니다. 투표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갈망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7일 진안군을 직접 방문하시어 농촌형 기본소득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진안군의 인구와 재정 규모를 예로 들며 "6,500억 원이면 1인당 250여만 원 수준"이라고 분석하시면서, "여기에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시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진안과 같은 농산촌 지역이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진안군이 미래 농촌 모델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실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발표된 지역별 공약들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천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파크골프장 확대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주거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마령면 스마트팜 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첨단 농업 기반 구축, 그리고 용담댐 인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 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 발전 제약 요소 해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안군청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정책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평가됩니다.

**2. 현재 진안군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하지만 현재 진안군의 정책 추진 방식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대부분의 개발사업과 예산 투자가 진안읍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11개 면 단위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안읍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면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겉으로 보기 좋은 건설과 건축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 소득 증대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미흡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시설을 짓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주민들의 일상생활 개선이나 경제적 도움으로 직결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셋째,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군민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여 실제 수요와 정책 공급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행정 주도로 기획되고 추진되다 보니, 정작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부족합니다.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과 전시성 사업 중심의 접근으로는 진안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진안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반시설의 확대를 넘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진안군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원지대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건강 치유 생태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진안 홍삼과 우수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진안만의 고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의존적 발전이 아닌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둘째, 새정부에서 제시한 농촌형 기본소득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진안군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인구 유입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모델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창업농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농업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정착과 성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재생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진안군이 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무주, 장수, 임실 등과 연계한 광역 생활권과 산업권을 구축하여 전북 동부권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의료,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호 보완적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통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자립, 지역화폐 기반 순환 경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농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은 단순한 수혜지가 아닌 '선도적 농촌 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단계별 추진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

이러한 정책 목표를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2026-2028년, 단기 전략)\*\*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촌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과 함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11개 면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2029-2031년, 중기 전략)\*\*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 치유 생태관광 특구의 본격적인 운영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무주, 장수, 임실 등과의 광역 연계 생활권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과 귀농·귀촌인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인구 유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3단계(2032년 이후, 장기 전략)\*\*에서는 농촌형 특례군 지정을 통한 행정·재정 자율성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확대된 행정·재정 자율성과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운영을 통해 진안군이 보다 유연하고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체 수익 창출 구조가 안정화되어 외부 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농촌재생 예산, 그리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와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지역 펀드 조성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 조달 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전라북도, 진안군, 그리고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안군민들께서는 이제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정책 참여자로서 스스로 원하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더 이상 주변부의 소외된 농촌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농·산촌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안군민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새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